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앞세워 최저임금 삭감

매월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없이 상여금 쪼개기 가능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관례 깨고 표결 날치기... 민주노총·금속노조, 28일 파업 등 총력투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결국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훼손했다”라며 강력 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5월 25일 새벽 02시 05분께 매월 1회 이상 지급 정기 상여금과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환노위는 02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날치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지급 정기상여금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액의 월 25%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 상여금 중 약 39만 원을 뺀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본다.

매월 1회 이상 지급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액의 월 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 복리후생비 중 약 11만 원을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해당한다.

매월 기본급 157만 원(2018년 기준)에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경우, 상여금 50만원 중 39만 원을 초과하는 11만 원과 복리후생비 20만 원 중 11만 원을 초과한 9만 원이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별도



의 인상 없이 최저임금이 157만원에서 177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제 임금상 효과는 사라진다.

월 정기상여금 제외 해당부분 25%는 2019년 25%→2020년 20%→2021년 15%→2020년 10%→2023년 5%로 줄어 2024년 결국 모든 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복리후생비 제외 해당부분은 2019년 7%→2020년 5%→2021년 3%→2022년 2%→2023년 1%로 줄다가 2024년 모두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환노위가 날치기한 법 조문은 허술하고 조잡해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현장에서 노사가 박터지게 싸울 여지를 만든셈이다.

금속노조는 “매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모든 노동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된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무력화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큰 개악안은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정차 특례’ 조항 신설이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의견’만 듣도록 규정했다. 신실한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 마음대로 ‘상여금 쪼개기’를 강행해 실질적으로 임금을 올리지 않거나 깎을 수 있다.

금속노조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칙을 훼손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노동자를 헬 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침을 결정한다.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5월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8일 최저임금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 · 금속노조 최저임금 삭감 저지 총파업

25일, 민주노총 비상중집 열어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선두로 총파업 복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최저임금 법 개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5월 25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시, 민주노총 가맹·산하 전체 조직은 5월 28일 15시를 기해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라고 만장일치 결의했다. 민주노총 전국 조직은 28일 두 시간 이상 파업을 벌인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적극 으로 나선다. 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5월 28일 13시 30분부터 2시간 파업을 벌이고 이후 각 지역본부 총파업 대회에 참가 지침을 현장에 내렸다.

수도권 지역 파업 조합원들은 28일 15시 국회 앞에서, 이외 지역 파업 조합원들은 지역별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규탄 투쟁



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5월 2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을 열고 이와 같은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책임은 모두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법 날치기 개정으로 노동존중, 소득주도 성장 조건 없는 최저임금 1만 원 3년내 실현 등 모든 약속을 쓰레기통에 집어

넣었다"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약속하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1만 원의 행복을 약속했지만 이제 1만 원의 절망이 됐다" 라고 개탄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제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 것이다. 5.28 총파업이 출발점이다" 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금속노조는 그동안 하후상박 연대임금 등을 제안하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주머니를 털어 재벌들을 살찌우려 한다" 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총파업은 구조조정 고용파탄과 누더기가 된 최저임금, 임금 격차로 인한 사회갈등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사태,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이 공범”

지엠 부평·창원·군산비지회, 여당당사 앞 농성... 실사·협약 즉각 공개, 해고자 복직·정규직 전환 등 요구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중단' 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들어갔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합의는 물론 지엠 자본과 문재인 정부는 합의 당시 비정규직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들은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국지엠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정규

직화,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을 열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한국지엠 실사 내용, 협약내용 즉각 공개 ▲부실경영, 불법착취 경영진 처벌 ▲해고자 복직, 정규직 전환 ▲근로감독 결과 발표, 불법파견 시정명령 강제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짐 ▲최저임금 개악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비정규직회는 오는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불법파견 범죄, 비정규직 해고, 노조탄압을 자행한 지엠 자본에 형세 8천여 원을 뜯긴 합의가 성공한 협상이라고 한다. 지엠 부실에 관한 진상규명보다 노동자에게 희생과 양보만 강요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도 공범” 이라고 규탄했다.